

작년 광주 산업생산 10년來 최대

자동차·가전 수출 호조 영향 24.5% 늘어

전남 광공업은 전년보다 4.3% 증가 그쳐

지난해 광주지역 산업생산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9년 30.6% 증가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 지수는 146.9로 전년보다 24.5%나 늘어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는 자동차와 가전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2월과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광공업 생산이 20~

60%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계장비와 자동차는 지난해 각각 전년 대비 52.5%와 27.6% 늘어 경기 회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계장비(74.5%)와 자동차(28.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5.5%) 부문의 증가세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24.2%나 증가했다.

제품출하 역시 자동차(25.8%), 기계장비(36.0%), 고무 및 플라스틱(19.4%) 등을 주축으로 20.1% 증가했으며, 재고는 기계장비(-20.8%), 식료품(-59.4%), 금속가공(-54.6%)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지역은 광공업 생산지수가 120.1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전기장비가 42.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기계장비(-36.1%), 금속가공(-28.5%), 석유제제(-9.6%) 등 가중치가 높은 부문들의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식료품(-4.1%)과 금속가공(-31.2), 기타 운송장비(-5.5%) 등이 감소세를 이끌면서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했다.

출하도 금속가공(-32.6%)과 식료품(-40.4%)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상품 재고는 1차 금속(47.6%)과 고무 및 플라스틱(102.2%), 석유제제(32.1%)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나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경우 작년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전년보다 16.7% 늘었다. 이는 2000년 16.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개월째 증가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09년에 경제 위기로 산업생산이 좋지 않았으나 지난해 수출과 제조업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을 6.1%에 달하는 등 산업생산이 상당히 빠르게 반등했다”며 “올해 1월에는 구제과와 한파로 산업생산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콤비타'

구신사동 가로수길 한 음식점에서 런칭행사를 펼친 가운데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물 실험을 금지하며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콤비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얻어진 자연 성분을 모아 피부 근본을 다스려주는 온 캐리얼 스킨케어 브랜드 '콤비타'가 31일 서울 강남

/연합뉴스

기아 '스포티지R' 러시아서 최우수상

佛 자동차 '시트로엥' 하반기 국내시장 진출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인 시트로엥(CITROEN)이 올해 하반기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한불모터스㈜는 시트로엥의 한국 내 독점 수입 판매권을 따내고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트로엥은 프랑스 최대 자동차 그룹인 PSA 푸조-시트로엥 그룹(PSA Peugeot-Citroen Group)에 속한 브랜드로, 92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오는 4월 열리는 서울모터쇼를 통해 국내 시장에 출시될 모델들을 공개한 뒤 준비 작업을 거쳐 하반기 본격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C3, C4 피카소, C5 등 4~5개 모델이 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과 상식을 깨는 과격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시트로엥은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1만 개가 넘는 점포망을 갖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맥주 제조·판매·재고관리 한눈에

오비맥주 '전사 업무 혁신시스템' 구축

오비맥주는 맥주 제조와 원료 구매, 판매, 재고관리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전사 업무혁신 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여의 작업 끝에 완성한 이 시스템은 생산 부터 출하, 재고관리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글로벌 기업 수준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흐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69.73 (-38.14)

코스닥지수

521.38 (-6.08)

금리 (국고채 3년)

3.96% (+0.08)

원·달러 환율

1,121.50원 (+7.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법원 '신안 방조제 논란' 오늘 심리

郡 입찰 결과 발표 강행... 종합건설업체 반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500억원대 방조제 개·보수 공사'와 관련, 발주처인 신안군이 법원 심리에 앞서 입찰 결과를 발표해 건설협회와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2009년 12월(89)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지는 작년 6월 105에서 7월 103, 8월 98, 9월 92, 10월 94, 11~12월 92 등으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입찰절차 속행 금지 거치분'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금지 거치분'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목포지원은 1일 오전 건설협회 전남도회와 신안군 관계자를 불러 2건의 거치분신청에 대해 심리를 열 방침이다.

건설협회가 냉랭한 것은 물론 경기 상승세의 둔화 전망 속에 원자재가격이 뛰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또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구획화해 공사 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학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 사업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따른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법에 명시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